李 대통령 '대국민 담화' 뭘 담나

'쇠고기'는 사과 ' FTA'는 설득

'소통 부재' 유감 표명… 경제 살리기·국민통합 협력 주문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과 쇠고기 파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의 뜻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함께 발언 수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조기 비준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마지막 보루인 국민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며 비준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즉,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개방과 다자간 무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한미 FTA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 사회의 유일한 '슈퍼 파워'인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견고히 하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괴담'이 정부의 미흡한 대국민 설명 등 '소통 부재'로 인해 기인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사과 내지 유감 표명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과 한미 FTA가 사실상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 야당이 정략적으로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해 연결고리를 차단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격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한 유감 표명으로 야당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 한미 FTA 처리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두 핵심 사안 이외에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와 선진 일류국가 건설 과제 모두 국민화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노당 천영세 대표,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대표, 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규탄 기자회견 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쇠고기 재협상이 유일 해법"

정 농림장관 해임안 제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결단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대여 공세를 폈다.

야권은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단독회동과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구, "검역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22~23일 처리를 시도하는 동시에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연계키로 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망치고 쇠고기 졸속협상을 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17·18대 의원단, 민주당 유승희, 김재윤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등은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추가협의는 국민 기만"이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야권은 또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사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재협상 없는 담화는 현재 조건대로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22~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TV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경기 하강 국면 등에 대해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는 이달 말 중국을 다녀온 뒤 취임 100일째인 6월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방송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이르면 22일께 국회를 방문, 임채정 국회의장 및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내달 5일께 제18대 국회 출범에 맞춰 국회 개원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최근 잇단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 참모는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 야당과의 대화부족이 국정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이란 판단하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농림부, '앉은뱅이 소' 도축 중단키로

미국 농무부가 20일 도살장에서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 또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드 샤퍼 농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온 예외규정을 철폐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다우너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샤퍼 장관은 "식품공급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다우너 규칙에 대한 오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무부 식품안전감독국(FSIS)이 부상한 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온 규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